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위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차 례

1. 발생 배경
2.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갈등 원인]**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임.
 -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한편,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함.
- ▶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러시아와 서방 간 안보회담에서 ‘NATO의 동진’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
 - 러시아는 안전보장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데 비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음.
- ▶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영향]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건실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 영향]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협력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임.
- ▶ **[전망 및 시사점]**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축,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발생 배경

- **[갈등의 근원적 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보다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NATO 가입 의지 천명]** 2021년 4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와 하리코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ATO 회원국 가입’이라고 주장함.¹⁾
 -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자국 국경 내 무력 충돌 증가와 러시아군의 움직임 활성화 등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의 증폭 가능성 및 안보적 우려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NATO 회원국 가입’이라는 대응방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2021년 5월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10월 미국 로이드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순방을 통해 미국은 ‘가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NATO의 문호 개방’을 약속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력과 군사지원’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도부에게 NATO 가입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음.
- **[러시아의 군병력 집결]**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포함 중요한 군사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NATO 가입 추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카드로 2021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자국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역에 집결시켜 안보적 위기를 조성한 바 있음.²⁾
 -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취임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과 다극체제 구축’을 자국 대외정책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국의 세력권 확장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CIS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및 NATO 회원국과의 완충지대 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탈냉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미국이 냉전시대의 산물인 NATO의 역할 강화와 동방 확장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표해왔음.
 -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유럽 행보(EU 및 NATO 회원국 가입)는 자국 외교안보 정책의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도발 행위이자 안보적 핵심 위협요인으로 간주되는 사안으로, 푸틴 대통령은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여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에 강력한 정치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주요 현안]** 독립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은 정치·경제·군사 안보 등 다양한데, 이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전략은 물론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

1) “Зеленский назвал вступление в НАТО единственным путем к миру в Донбассе”(2021. 4. 6), РИА Новости, <https://ria.ru/20210406/zelenskiy-1604422783.html>(검색일: 2022. 1. 25).

2) “What’s Behind The Russia-Ukraine War Fears -- And What Might Actually Happen?”(2021. 11. 25), RFERL.org, <https://www.rferl.org/a/russia-ukraine-war-fears/31579046.html>(검색일: 2022. 1. 25).

- 양자관계의 대표적 사안으로 크림반도의 영유권 분쟁, 흑해함대의 분할 및 러시아군의 세바스토폴 기지 주둔 문제, 탈러시아 성향의 다자협력기구인 GUAM의 결성과 활동, 오렌지혁명과 친서방 노선의 정부 출범, 가스 분쟁,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에 대한 양국의 명백한 입장 차이, 우크라이나의 NATO 및 EU 가입 행보,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CU)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문제, ‘유로 마이단’ 사태에서 촉발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지역 친러 반군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이 있음.
 - 특히 사안의 성격상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NATO 가입 천명과 돈바스 분쟁 가능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
- **[러시아와 미국의 상이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러시아의 시각]** 미국은 철저한 진영 논리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패권 국가로 상대국의 입장과 특수한 상황,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에, 러시아는 서방의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정권 교체전략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 등을 대외적 입지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함.³⁾
 - **[미국의 시각]**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중대한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주의 세계질서 전복 기도, NATO 및 EU 체제의 단일성 훼손, 공격적 대외정책 구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 중 하나임.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입장 차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서방과 러시아는 상이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서방의 시각]** 미국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감행한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서방 측의 우려는 단순히 러시아의 국경지역 병력 이동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며, 지난 6개월 동안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공개적 언급(우크라이나에 대한 선동적인 기사 게시를 통해 독립국가로 존재할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임.
 - 미국은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중동 난민 문제와 러시아 배후설, 그리고 유럽 에너지 공급 위기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둘러싸고 상호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경고를 유럽연합 측에 보낸 것임.
 -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 국무부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일종의 ‘정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를 가로지르는 군대의 이동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3) 박정호, 정민현(2021),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4, No. 25, pp. 3~4.

4) 위의 글.

- 러시아 전문가들은 자국이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감행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개시할 실질적인 이유와 명분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⁵⁾
- 2021년 4월과 11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에 보내기 원하는 ‘정치적 신호(2021년 6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러시아의 ‘레드 라인’ 준수)이자 일종의 ‘전략적 포석(서방 측이 러시아의 국익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 고려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일종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도록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는 정책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 2021년 12월 7일 러·미 정상 간 화상회담에 이어 12월 15일 러시아가 미국 측에 전달한 ‘러시아와 미국·NATO 회원국 간 안보조약 초안’을 통해 러시아와 미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남.

- [러·미 화상 정상회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별도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회담 결과에 대한 양측의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이견이 표출됨.
 - [러시아 측 브리핑] 우크라이나 ‘내부’ 위기(intra-Ukrainian crisis)와 2015년 민스크 합의사항의 이행 미흡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현 사태의 책임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 위협하게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NATO에 있다’고 강조함.⁶⁾
 - [미국 측 브리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는 한편, 사태 악화 시 강력한 경제제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함.⁷⁾
 - * 미국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접근 차단 등의 금융제재를 비롯해 첨단기술 제품(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분야 등) 및 핵심 부품(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수출 규제 등 강력한 대러 제재안을 검토 중이나, EU뿐 아니라 미국 내 산업계에서도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와 이견이 상존함.⁸⁾
- [러시아의 안보조약 초안 제시] 12월 17일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15일 미국에 전달한 ‘러시아와 미국 간 안보조약 초안’ 및 ‘러시아와 NATO 회원국 간 안보조약 초안’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재차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⁹⁾

5) 대표적으로 Ivan Timofeev의 글을 참조할 것. “Война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базовый сценарий”(2021. 11. 25), БалдайКлуб,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voyna-rossii-i-ukrainy-bazovyy-stsenariy/>(검색일: 2022. 1. 26).

6)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жоозефом Байдено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1. 12. 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315>(검색일: 2022. 2. 1).

7) “Readout of President Biden’s Video Call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2021. 12. 7),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2/07/readout-of-president-bidens-video-call-with-president-vladimir-putin-of-russia/>(검색일: 2022. 2. 1).

8) “EXPLAINER: What are US options for sanctions against Putin?”(2022. 1. 26), AP, <https://apnews.com/article/us-sanction-options-russia-ukraine-49557915cbd254b01d5cb2f210803b47>(검색일: 2022. 2. 1).

9) “О российских проекта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правовых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США и НА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1. 12. 17),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790809/(검색일: 2022. 2. 1).

- 해당 안보조약 초안은 NATO의 동진(東進) 중단(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신규 가입 중지), 구소련 내 군사기지 건설 및 군사행동 중단을 골자로 함(글상자 1 참고).
-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12월 21일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와 23일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미국과 NATO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장기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함.¹⁰⁾

글상자 1. 러시아가 제안한 안보조약 초안의 주요 내용

□ ‘러시아와 미국 간 안보조약 초안’의 주요 내용

- 양측은 상호간 동등하고 불가분의 안보 원칙 아래 상대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나 행동을 취하거나 지지하지 않음.
- 미국은 NATO의 동진(東進)과 구소련 국가들의 NATO 신규 가입을 중단할 의무를 지며, 구소련 국가들과 NATO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영토에 군사기지를 설립하거나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과 양자간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음.
- 양측은 병력과 무기를 상대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에 배치하지 않으며,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자국 영토 밖 또는 자국 영토 내 상대국을 저격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지 않음.
- 양측은 핵무기를 자국 영토 밖에 배치하지 않으며, 본 조약 발효 시 자국 영토 밖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와 관련 인프라를 철수함.

□ ‘러시아와 NATO 회원국 간 안보조약 초안’의 주요 내용

- 양측은 동등하고 불가분의 안보와 협력 원칙 아래 상대국의 안보를 대가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으며, 상대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음.
- 양측은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NATO-러시아 위원회를 포함하는 양자 및 다자 틀에 기반한 긴급 자문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군사 행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신뢰구축 메커니즘을 활용함.
- 러시아와 NATO 회원국은 병력과 무기를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영토에 추가로 배치하지 않으며(1997년 5월 27일(러시아-NATO 기본협정 체결) 이전 수준으로 복귀), 예외적인 경우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
- 양측은 상대국을 저격할 수 있는 지역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음.
- NATO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의 신규 가입을 포함한 NATO의 추가 확장을 중단할 의무를 지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롯한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에서 군사행위를 중단함.

자료: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о гаранти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1. 12. 17), https://mid.ru/ru/foreign_policy/rso/nato/1790818/; “Соглашение о мера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1. 12. 17), https://mid.ru/ru/foreign_policy/rso/nato/1790803/(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2. 1).

10)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коллегии Минобороны,”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1. 12. 21),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402>; “Больш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1. 12. 2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438>(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2. 1).

- [3라운드 안보회담] 2021년 12월 31일 러·미 정상이 러시아의 안보 요구 관련 논의를 위한 ‘쓰리 트랙(3라운드)’ 안보회담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2022년 1월 러·미 외무차관 회담(10일, 스위스 제네바), NATO-러시아 위원회 회담(12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러시아 회담(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이 개최됨.¹¹⁾
- [러·미 외무차관 회담] 약 8시간에 걸쳐 긴 시간 진행된 회담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간 군사훈련 제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복원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침.¹²⁾
 -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회원국 가입 문제를 비롯한 NATO의 동진 중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을 촉구함.
 -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본 논의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미국은 NATO가 다른 국가에 문을 닫게 하려는 그 누구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NATO-러시아위원회 회담]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상호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며 교착 상태로 마무리됨.¹³⁾
 - 러시아는 안보 요구안 타결 필요성을 지속 강조했으며, NATO 측은 국가 주권과 NATO의 개방기조 등 핵심원칙에 대한 타협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혹독한 경제적 및 정치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회담에 대해 양자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OSCE-러시아 회담] 이전 회담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직면함.¹⁴⁾
 - 러시아는 재차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인한 가운데, 합당한 시한 내에 법적으로 공식화된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건설적인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함.
 - OSCE 측은 OSCE 지역 내 전쟁 리스크가 과거 30년 이래 가장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본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지속가능한 대화의 틀을 구축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함.

11) “Путин и Байден договорились как пройдут переговоры по гарант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21. 12. 31), <https://rg.ru/2021/12/31/putin-i-bajden-dogovorilis-kak-projdu-t-peregovory-po-garantiyam-bezopasnosti.html> (검색일: 2022. 2. 1).

12) “Как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России и США о гаранти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что думают эксперты,” Би-би-си(2022. 1. 11),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9817256>(검색일: 2022. 2. 1).

13) “NATO, Russia in a standoff after talks in Brussels,” Politico(2022. 1. 12), <https://www.politico.eu/article/nato-russia-in-a-standoff-after-talks-in-brussels/>; “Россия vs США переговоры,” Политком.RU(2022. 1. 20), <http://politcom.ru/24414.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2. 1).

14) “OSCE Meeting Ends, No Movement Made In Russia-Ukraine Crisis”(2022. 1. 13), RFE/RL, <https://www.rferl.org/a/ukraine-osce-russia-us-diplomacy/31652032.html>; “More tense Ukraine talks loom at OSCE meet”(2022. 1. 13), EURACTIV,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more-tense-ukraine-talks-loom-at-osce-meet-in-vienn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2. 1).

■ **[후속 회담]** 세 차례의 안보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2022년 1월 21일 러-미 외무장관 회담(스위스 제네바)과 1월 26일 러-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자회담(프랑스 파리)이 개최됨.

- [러-미 외무장관 회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회동에서 양측은 본 사태 해결의 공(ball)이 상대방 코트(court)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함.¹⁵⁾
 - [러시아, 안보 요구안에 대한 미국 측의 서면 응답 요청] 러시아는 미국 측에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차주까지 서면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그 이후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
 - ※ [미국의 서면 응답] 1월 26일 미국은 러시아 측에 서면 응답을 전달했으며,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한편, 그 대안으로 핵무기 통제 및 군사훈련 제한 등 상호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¹⁶⁾
 - * 1월 31일 러시아가 미국의 서면 응답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참여한 안보 사안이 아닌 포괄적인 이슈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¹⁷⁾
- [4자 회담] 8시간에 걸친 노르망디 형식의 4자 회담 개최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스크 협정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밝힘.¹⁸⁾
 - 4개국은 2주 내에 베를린에서 2라운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 **[참여한 입장 차이]** 이상의 회담에서 볼 수 있듯 러-미 간 NATO의 동진과 구소련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임.

- 러시아는 안보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장받기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책으로 내놓고 있음.
-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에 대한 지원, NATO 체제의 결집력 강화 등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푸틴 정부는 지정학적 이해 보존을 핵심 과제로 인식함에 따른 근본적인 갈등 요인에 기인함.¹⁹⁾

15) "U.S. and Russia agree to keep talking after meeting on Ukraine"(2022. 1. 22),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top-diplomats-us-russia-meet-geneva-soaring-ukraine-tensions-2022-01-21/>(검색일: 2022. 2. 2).

16) "U.S. and NATO Respond to Putin's Demands as Ukraine Tensions Mount"(2022. 1. 26),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1/26/us/politics/russia-demands-us-ukraine.html>(검색일: 2022. 2. 2).

17) "Russia responds in writing to US ahead of Blinken-Lavrov call on Ukraine crisis"(2022. 2. 1), CNN, <https://edition.cnn.com/2022/01/31/politics/us-russia-un-security-council-meeting/index.html>(검색일: 2022. 2. 2).

18) "Negotiating parties in Paris talks commit to upholding ceasefire in eastern Ukraine"(2022. 1. 26), France24,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20126-france-hosts-russian-and-ukrainian-negotiators-in-bid-to-defuse-crisis>(검색일: 202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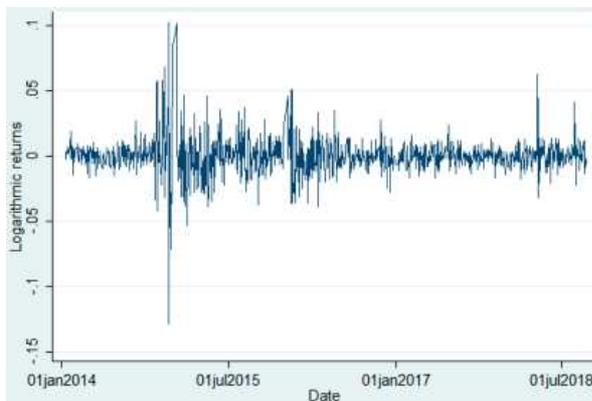
19) 박정호, 정민현(2021),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p. 14,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루블화 가치 절하(환율 절상) 및 급격한 자본유출(capital outflow) 등 러시아 자본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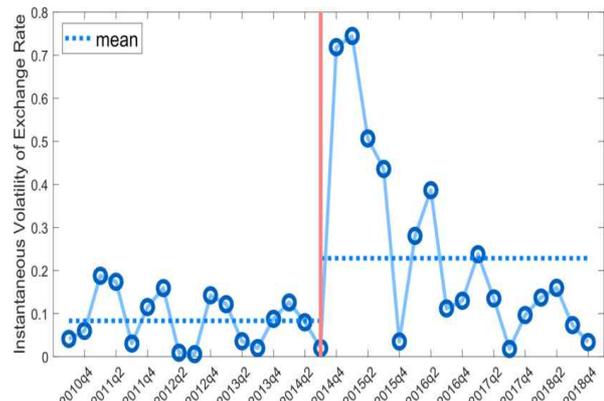
- [환율 불안정] 러·미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를 경고하는 등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달러당 루블화 환율(RUB/USD)이 급등하였음(그림 1 좌측 패널 참고).
 -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것²⁰⁾은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실제로 2014년 러시아 경기침체는 대러 경제제재라는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부정적 대외충격이 더해지면서 루블화 가치가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 부문 경색이 실물 부문에 전이되면서 발생한 불황이었음.
- [자본유출 가능성]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의 금융·에너지·방산 부문에 대한 분야별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국내 자본의 해외반출이 급증한 바 있으며,²¹⁾ 러·미 갈등 고조로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14년 이후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²²⁾ 러시아 경제는 오랜 기간 심각한 순자본유출 문제를 겪고 있으며(그림 1 우측 패널 참고), 러·미 갈등 격화로 순자본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20) 대러 경제제재는 환율 수준뿐 아니라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다음 그림과 같이 2014년 대러 제재 이후 환율 및 환율 수익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주: 루블 환율 수익(추정 값, 로그)의 변동성을 나타냄.

자료: Sultonov, Mirzosaid(2020),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Russian Financial Markets," *Economies*, 8(4), pp.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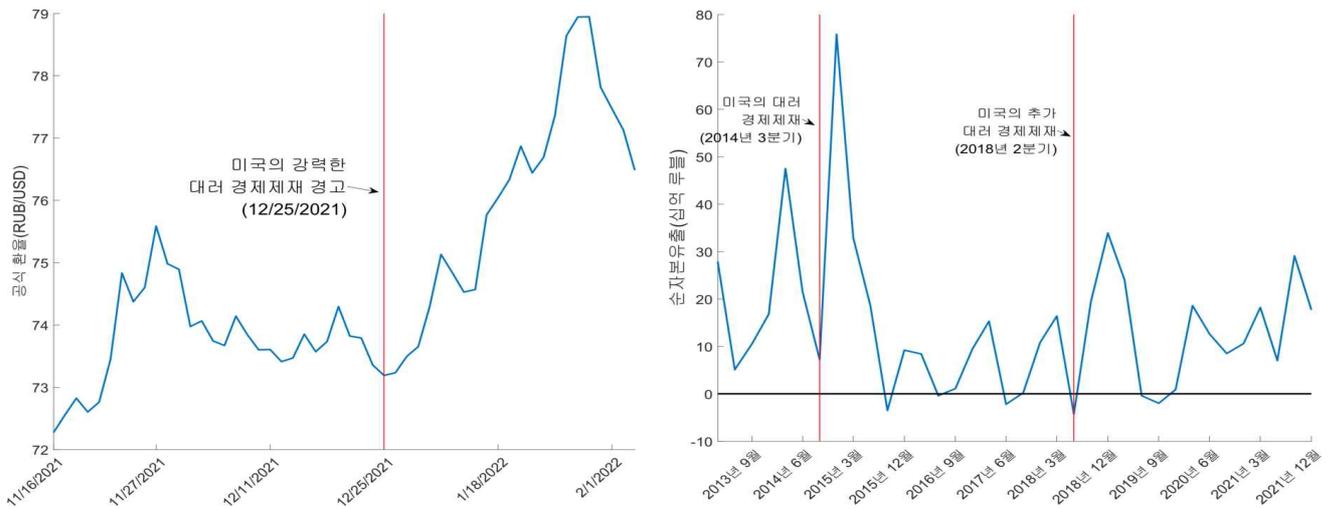
주: 꺾은선 그래프는 McConnell and Perez-Quiros(2000)의 방법을 응용하여 계산한 환율의 분기별 변동성(volatility)이며, 점선은 제재 전후 분기별 변동성의 평균을 나타냄.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7. 25).

21) 실제로 2018년 2/4분기 동안 러시아 거주 외국인이 보유한 러시아 국채 15%가 매각됨(약 3,450억 루블, 한화 6조 원). "Russian Financial Policies May Mitigate Sanction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8. 9. 17).

22) 정민현, 민지영(2020).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20-10, pp.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1. 환율 및 순자본유출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2. 3).

■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4년과 비교할 때 자본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를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고] 러시아는 견실한 재정건전성과(그림 2 좌측 패널 참고) 충분한 외환보유고(그림 2 우측 패널 참고)를 확보하고 있어 2014년과 같이 자본시장 충격이 급속하게 실물 부문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대응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기록한 2020년²³⁾을 제외하고 2014년 경기침체 이후 러시아는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음.²⁴⁾
 - 정부수입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를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는데,²⁵⁾ 유가와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²⁶⁾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외부채에 대한 즉각적 대응능력 지표로 활용되는 '대외부채 대비 대외자산' 역시 2016년 이후 급증하여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2014년 경제위기 때보다 강화되었음.
 - 위급 시 유용할 수 있는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누적 자산이 충분²⁷⁾하다는 점도 부정적인 대외여건에 대한 단기적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3)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급증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8%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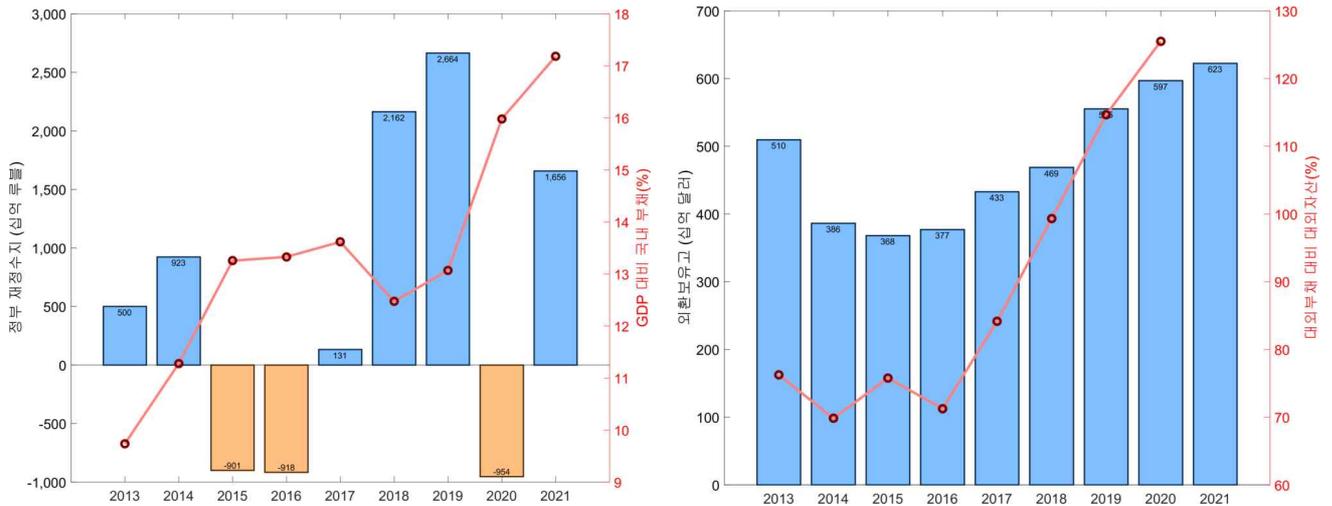
24) GDP 대비 국내부채는 2018년 이후 상승 추세이지만,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25) 박정호, 김석환, 정민현(2019),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개통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9-27, p.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2022년 러시아 정부의 균형예산을 위한 원유 가격은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음. Kozhanov, Nikolay(2021. 12. 8), "OPEC+: Locked in a Russia-US-Saudi triangle," MEI@75.

27) 러시아 국부펀드는 국민연금 보장 및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제 중심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김준현(2019), 『국부펀드의 운용전략 및 리스크관리 연구』, p. 21, 감사원, 기금에서 보유한 유동성 자산이 GDP 대비 7% 이상일 경우 러시아 정부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음. 최근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보유한 유동성 자산은 GDP 대비 7.3%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Putin's Limits on NWF Spending Reflects Inflation and Depletion Concerns"(2021. 10. 4), SWF], 다음 그림과 같이 2018년 이후 누적 자산이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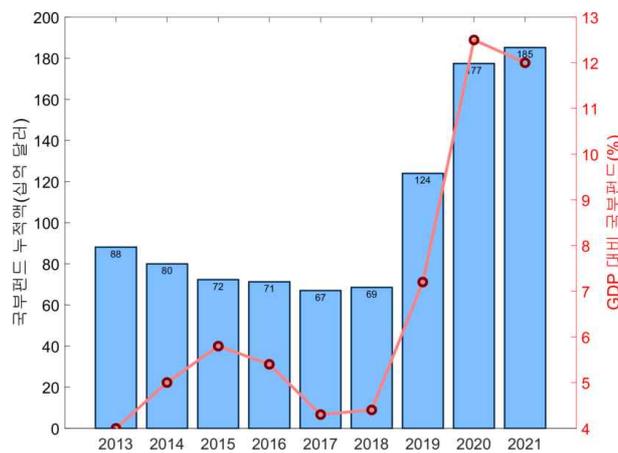
그림 2. 러시아 재정수지 및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러시아 재무부,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2. 3).

■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 러·미 갈등 격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심화 또는 장기화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임.

- IMF 연구²⁸⁾에 따르면 2014년 크림사태 이후 발효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 실물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²⁹⁾ 이러한 영향은 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평가됨.³⁰⁾



자료: 러시아 재무부(검색일: 2022. 2. 1).

28) 예를 들어 IMF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2014~18년 사이 매해 경제성장률을 0.2 p.p. 하락시켰다고 보고하였음(IMF, Russian Federation - Article IV Staff Report, Washington DC, 2019).
 29) 박정호, 정민현(2021),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21-25, p. 9.
 30) △자산 수익률 저하 △불확실성 증대 △부정적 자산 효과(wealth effect) 등의 영향으로 금융 부문 제재가 실물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하는 것으로 보이며(상계서, p. 11 참고), 금융 제재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여신 여력이 제약되어 이들 기업의 생산 활동까지 동반 위축되는 현상이 발견됨[Connolly, Richard(2015), "The Impact of EU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On target?: EU Sanctions as Security Policy Tools, Iana Dreyer and José Luengo-Cabrera Ed., pp. 29-38].

- 미국은 러·미 갈등이 고조될 경우 대북, 대이란 경제제재 수준의 고강도 수출 규제 및 국제은행간결제 시스템(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음.
- 특히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금융제재는 금융기관의 달러 지급결제를 제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달러화를 통한 거래비용 및 달러화를 통한 자산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존의 금융제재보다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경제제재는 △국가간 이해충돌 △자국 및 타국 민간기업의 반발 등의 요인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수출 제한 및 SWIFT 배제 안(案)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유럽 일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맞수를 두고 있으며,³¹⁾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경우 러시아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미국 및 제재 참여국의 민간기업이 직면하는 거래비용이 상승하므로 이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³²⁾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차원의 대응으로 탈달러화(de-dollarization)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³³⁾ 러·미 갈등 고조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실물 충격 외에도 대러 경제제재가 보수적인 정부 지출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경기 안정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2014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된 러시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 충격에 대해 금융 부문이 더욱 취약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수적인 정부 지출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
 - 특히 2021년 고(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추가 대러 경제제재 발효 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음.³⁴⁾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 영향] 러·미 갈등 고조가 단기적으로 러시아 자본시장을 교란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이러한 교란요인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러 경제협력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022년 1월 28일 이후 러시아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1 좌측 패널 참고), 같은

31) EU 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러·미 갈등이 한창 고조되는 12월 21일 대(對)유럽 천연가스 공급망인 아말-유럽 가스관 운영을 중단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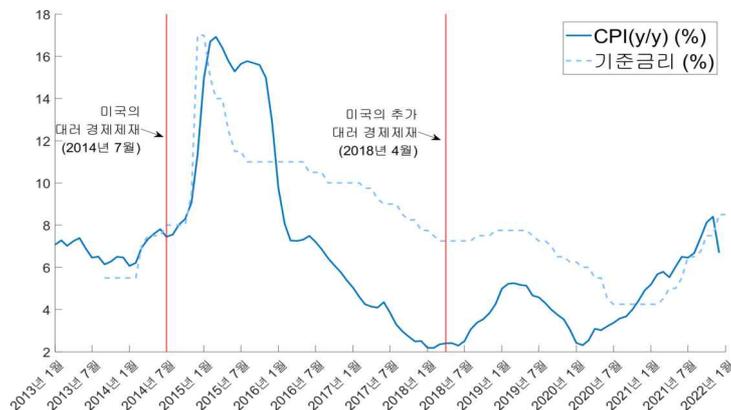
32) 이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 측에 미국 주도의 달러 중심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우회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양자협력을 이미 제안(러시아의 SPFS와 중국의 CIPS 연계안)하는 등 SWIFT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음["China-Russia partnership 'key to balance US hegemony'", (2021. 3. 22), Global Times].

33) 박정호, 정민현, 앞의 글, p. 12 참고.

34)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4년, 2018년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로 자본시장이 교란되면서 물가가 급등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였음.

기간 러시아 주식시장도 RTS(Russi Trading System) 지수가 반등하는 등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러시아 현지에 진출하거나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 민간기업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고정 투자를 요하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³⁵⁾ 단기적으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협력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협력 경험 및 신뢰 기반 등의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s)가 중시되는 러시아 경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³⁶⁾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구축한 협력 기반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영향: 위협요인] 러·미 갈등 격화로 인해 대러 경제제재가 더욱 장기화되거나, 고강도 대러 제재 도입으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불확실성 증대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한-러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
- 특히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및 수익성 악화가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기업 협력보다 비대칭적으로 훨씬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러 경제협력에 잠재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 영향: 기회요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협력 다변화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면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경제의존을 축소하고 동방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이후 러시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방정책’³⁷⁾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특히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동북아(특히 중국)와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³⁸⁾
 - 또한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EAEU 체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바,³⁹⁾ 한-EAEU FTA 등의 무역협상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2. 1).

- 35) 박정호, 김석환, 정민현, 강부균, 김초롱, 세르게이 슈트린, 올라 트로피멘코, 이리나 코르군(2020),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36) 박정호, 정민현, 강부균, 정동연, 김초롱, 제성훈, 세르게이 루코닌, 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2019),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37) 동방정책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낙후된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38) 김정기, 강명구, 이상준(2018),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약요인」, 『러시아연구』, 29(1), pp. 33~63.

4. 전망 및 시사점

■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서 요구 배경과 전략적 목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과 NATO 측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전보장 문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

-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탈냉전 시기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 과정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의 약속(NATO의 동방 확대 금지) 불이행과 자국 참여 배제,³⁹⁾ 유럽의 안보хин장 원칙(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 위협 증가 및 희생 불가) 위배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임.
 -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탈냉전 시기 NATO의 다섯 차례에 걸친 동방확장 중 네 차례⁴¹⁾가 자신의 임기 중에 발생한 바 있지만, 당시 러시아는 적절한 대응 수단과 전략이 사실상 부재했음.
- 최근 NATO의 추가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대응 방침 천명은 대내적(장기집권을 위한 지지세력 결집과 우호적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 및 대외적(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자국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유럽 안보 질서 구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보 및 의견 개진 등) 차원의 전략적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 보임.

■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향]** 서방(미국과 NATO) 측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서에 대한 답변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2021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 및 NATO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보장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서방 측에 전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음.
- 2022년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와 자국의 안전보장 문제, NATO의 역할과 유럽 안보질서 전반에 대해 연이은 안보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탈냉전 시기 러시아가 자국 및 유럽 안보 이슈에 대해 서방 측과 진행한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임.⁴²⁾
-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갈등 해소 여부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미국(대서양 동맹 복원 및 NATO의 동방 확장정책 고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분쟁의 존재 공식적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의 출현과 추가적 영토 상실 불허, 중동부 유럽에서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우크라이나와 군사협력 진행 등) △유럽연합(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예방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 기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고려 대러시아 관계의 과잉 리스크 발생 우려) △러시아(서부

39) 박정호, 정민현, 앞의 글, p. 13.

40) Dmitri Trenin, "What a Week of Talks Between Russia and the West Revealed?" Carnegie Moscow Center, <https://carnegiemoscow.org/commentary/86222>(검색일: 2022. 1. 26).

41) 2004년: 발트 3국(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2009년: 크로아티아·알바니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 마케도니아.

42) *Ibid*.

국경지대의 안보 리스크 해소,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 과정 참여 및 의견 개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 △우크라이나(서방세계 편입 추구, 돈바스 분쟁의 조속한 해결 기대, 국가안보 확립 및 경제 발전 등)의 입장과 목표가 상이함.⁴³⁾

- 미국과 NATO 측에 전달한 러시아의 안전보장 초안이 사실상 자국 대유럽 정책의 전략적 목표라는 사실을 감안하다면, 러시아는 외교적 성과가 자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수단을 전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쟁 시나리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노르드스트림-2 제재 가능성), 안보협상의 대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이라는 점(2008년 조지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상대는 CIS 국가), 자국의 이해관계(서부지역 안보 관련 협상 테이블 마련 및 자신의 요구 전달)가 상당 정도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러시아 주요 인사들이 군사-기술적 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미국과 NATO의 민감 지역(칼리닌그라드, 벨라루스, 중남미 등)에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중국·이란·벨라루스 등과 군사협력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지 및 확대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임.⁴⁴⁾
-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몰도바화'를 추구할 경우 돈바스 자치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러시아 군대의 주둔 합법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존재함.⁴⁵⁾

■ **[우크라이나 위기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서양 동맹 강화 △NATO의 역할과 위상 규정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기회 확보 및 의견 개진 △러시아와 서방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성격 규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자체가 탈냉전 세계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국가 주권 침해와 영토 분쟁)일 뿐 아니라, 유럽 안보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NATO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여지가 있음.
- 현재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인데,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자면 △키예프 및 동유럽, 흑해 및 기타 지역에서 NATO의 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한 안보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의 NATO 회원국 가입 기대감과 미국의 암묵적 지지에 핵심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서방 측에 지속적으로 자국 안보에 대한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 시 유럽 안보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일종의 기 싸움을 펼치고 있음.

43) Ivan Timofeev(2022. 1. 10), "Ukrainian Crisis: Political Economy of Confrontation," БалдаиКлуб,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ukrainian-crisis-political-economy/>(검색일: 2022. 1. 27).

44) Dmitri Trenin, "What a Week of Talks Between Russia and the West Revealed?" Carnegie Moscow Center, <https://carnegie-moscow.org/commentary/86222>(검색일: 2022. 1. 26).

45)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는 몰도바공화국 영토 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자 비공식 독립국으로, 러시아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있음.

-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양측이 입을 정치적·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법적 문서 작성은 사실상 상호 합의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양측은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대외적 환경이 한반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서방, 한반도: 미-중-일-러 세력 간 경쟁 및 갈등 구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추동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립 구도가 조성될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가들(한국과 일본)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압박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과도 일정 정도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방(한-미-일) 대 북방(북-러-중) 삼각동맹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시기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러-미 관계의 악화와 러-중의 전략적·전면적 협력 관계의 강화는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및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KIEP**